

#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7.15.(금) 10:30, 이효정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자로 통일부 부대변인직을 맡게 된 이효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는 만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기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취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동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제 7월 14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지도하고, 박정근 내각 부총리가 보고하는 형식을 띠었으며, 내각 성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상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1년에 서너 차례 분기별로 개최되어 당 경제계획 관철방안을 논의하고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로서 주로 내부 경제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상반기 경제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대책들을 토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2020년 이후로는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이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통상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때 통일부나 적십자나 직원들이 인도하는 것이 관례였었는데요.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거든요.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이 통일부에 탈북어민 인도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는지, 만약 요청이 있었다면 왜 통일부나 적십자사 직원이 그때 인도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송환 절차가 주로 통일부를 통해서 적십자사 직원이 인도하는 게 관례였는데 왜 그때 관계부처 협의에서 경찰특공대가 호송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지, 그러니까 통일부 요청이 있었는지요? 그때 당시.

<답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이 결정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관례대로 안 하고 경찰특공대가 하게 된 과정에, 그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통일부에서 인도해라.'라고 이런 언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변> 구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동 사안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질문> 아니, 그때 당시 11월 15일에, 2019년 11월 15일에 김연철 장관을 통해서 한 발언이 있거든요. 그때 김연철 장관이 했던 발언이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기 때문에, 보통 살인범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나 적십자사에서 판문점 연락 간에 원래 인도를 하는데, 호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인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경찰특공대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김연철 장관이, 당시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답변> 같은 말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송환 결정과 송환 절차는 당시 안보실 주도 관계부처 협의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럼 연관된 질문인데요. 당시에 청와대가 방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자.'라고 결정을 했

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통일부가 11월 5일에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서 '탈북어민을 추방하겠다. 그리고 선박을 인계하겠다.'라는 통지문을 보냈고, 다음 날 북한이 우리가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또 통일부를 통해서, 통일부가 그 의사를 확인했지요. 이러한 대북통지문 발송과정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청와대... 국정원의 협조요청에 따른 건지요?

**<답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실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통일부는 추방 결정에 따른 대북통지와 언론브리핑을 담당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것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은. 국가안보실 주도의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지난 화요일에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것을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배경도 이제 사실 의문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대통령실 지시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단독 결정에 따른 것이었는지요?

**<답변>**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의 요청, 제출 요구가 있었고,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해

서 저희가 7월 12일에 해당 의원실에 사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의원실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주는데,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에 공개한 적은 그렇게 많...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의원실에서 요청했으니까 의원실에 자료 협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알려진 거니까 언론에 공개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인데, 물론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그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이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공개하자.'라고 통일부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통일부 장관이 최종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진을 공개하니, 마니 할 때. 그러면 그게 통일부 차원의 단독 결정이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송환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출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 송환 시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진을 제공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했다, 가 아니라 그 공개 결정이 최종선이 통일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나 협조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주민 송환 시에 통상적으로 기록 차원에서 촬영을 보관해왔고,

**<질문>** 아니, 그러니까 촬영했던, '기록 차원의 촬영했다.'가 아니라,

<답변> 관련 내용도,

<질문> 이번의 공개 결정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공개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전례가 있고, 그러면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통일부 차원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사진자료를 제출을 했고, 과거에도 이런 주민 송환 시 국회나 언론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예, 그러면 일단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번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

<답변>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